

민주화해

Vol. 91

2018 March + April

03

04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길



Contents



02 포토 에세이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소식

06 권두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한미 간 구체적 대북 협상 로드맵 마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만들어야

12 시선 대 시선

남북관계의 틀로 들어온 북핵문제,

평창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이어가는 정상회담 되어야 | 고유환·윤덕민

18 특집

• 2018년 한반도 대 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

① 남북·북미협상의 지속 위해 다층적 교류협력·신뢰구축 필요 | 정창현

② 미국의 안보 위협하는 북한, 북미 간 점점 찾는 중간지대 역할 중요 | 박인휘

③ 평창을 통해 본 국민들의 통일·북한의식

차근하게 평화논의 시작해야 | 조영주

30 이슈 앤 포커스

2018년 북한 경제 어디로 갈까?

높아진 대외의존도, 대북제재 장기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 김석진

34 특파원 리포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북핵 해결 과정 속 러시아의 이일대로(以佚待勞) | 정의길

38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제1사무차장

하나 되는 태권도, 통일 코리아의 시작입니다! | 염규현

42 뉴노멀, 한반도 평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분단과 통일 | 김성경

46 줌인 북한

‘음악정치’로 본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평화의 절실함에 공감한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 천현식



50 평화 교육, 통일 교육

통일·평화·시민 새로운 통일교육을 꿈꾸다 | 함규진

54 연재

마음으로 만나는 북한 ⑤

평창 '임시평화체제'와 마음의 국제정치학 | 구갑우

58 통일 웹툰

Hello, 북한 - 제1편 평양 & 함흥 -

60 문화 모니터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③ 과외활동 나가는 아이들 | 조찬현

문화 속 통일미래 ⑦ 21세기에 도착한 20세기의 바람 :

식민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감내한세 여전사의 파란만장

- 조선희의 『세 여자』론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⑮ 시대의 모습을 담은 천재화가 김홍도 | 이상현

68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0 민족화해 네트워크

• 민화협 제20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

• 민화협, 평창에서 '한반도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72 민화협 사서함



Cover Story

2018년 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화해를 향한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5월 북미 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다. 오랜 분단과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봄날이 다가오길 바라본다.

민족화해 2018년 03+04월호(격월간, 통권 91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8년 3월 14일 발행인 김홍걸 편집인 공용철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석진, 김성경, 박인휘, 조남훈, 전영선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전화 02-761-1213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Photo Essay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소식

오랜 추위를 뚫고 기어이 터져 나오는 봄꽃처럼
한반도에도 조심스럽게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발걸음은
서울과 평양을 오갔고,
이제 세계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려 한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험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제 다시 봄을 맞아본다.
새로운 희망을 불러본다.



01

01. 평창동계올림픽은 얼어있던 한반도에 균열을 가져왔다. 2월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기수인 남측 원윤종, 북측 황충금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했다.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연합
02. 얼음 위에 함께 선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료이자 팀이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승패를 떠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합



02



03

03.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과 만남을 제의했고, 이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했다. 2007년 이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로 이뤄지려 하고 있다. ©연합



04



04.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3월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연합



[Interview]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별보좌관



한미 간 대북 협상 로드맵 마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만들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천지개벽이란 말이 실감 나는 지금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은 지금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담아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문정인 특보를 만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았다.

대담 · **공용철** 『민족화해』 편집인·KBS PD

정리 ·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 **김성현** 객원작가

Q 최근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특사단이 상호 방문하고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역사적 합의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란 큰 이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A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미 간 갈등 격화로 한반도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나오던 시기였잖아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개최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평창올림픽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Peaceful) 올림픽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평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올림픽 평화는 평창올림픽

을 계기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인데, ‘평화 올림픽’에서 ‘올림픽 평화’로 가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교류,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되는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북한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 의도와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A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호 발사와 더불어 이른 바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일차적 변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입니다. 미국의 고립, 봉쇄 정책과 중국의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남측과의 관

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이 응원단, 예술단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과거처럼 체제 선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실상 체제선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린 정상국가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해요.

통남통미 전략 택한 김정은의 외교력

Q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참으로 예상 밖이라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사실 획기적 내용이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은 김정은의 전략적 포석이라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말, 그것도 남측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북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도 합의했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을 하지 않고 핵무기, 재래식 무기 등을 남측을 향해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년 수준이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용인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이와 더불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죠.

이 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 선대 유훈이라는 점

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을 김정은이 카드로 제시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 미국의 허를 찌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외교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Q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A 여러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11월 29일 화성-15 발사 이후 북한은 핵 무장력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추었다는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북한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적 포석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국정목표는 병진정책 아닙니까. 핵을 가졌으니 이제는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제재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졌지요.



그러나 그 돌파구를 남쪽에 찾겠다는 것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문 대통령이면 미국과의 접촉과 대화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직한 중재인(honest broker)’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결국 북한이 ‘통남통미’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 측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요.

Q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요? 이미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핵 보유가 명기되어 있고 핵은 김정은 체제 유지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인데 그리 쉽게 포기 할까요?

A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입니다. 현재의 모든 여건이 해소된다면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북한은 유일지도체제이고 수령제사회인데, 아무리 사회주의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했다고 해도, 수령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미국도 화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밀한 전략과 진정성 갖춘 협상 추구한다면 북핵 폐기의 시작도 불가능하지 않아

Q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합의사항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A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최고 관심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의제는 평화와 비핵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이산가족상봉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경험 사업들의 재추진,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사업 재개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 전반적인 의제는 이 양자를 절충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Q 5월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합의 가능한 범위는요?

A 역시 예단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폐기(CVID)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미국에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버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평화공존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바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 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도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가 북핵 문제 해결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이라면 한미연합훈련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과 최근 북중 관계 악화를 감안할 때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Q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미가 제공할 당근은 무엇이며 비핵화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devil is in details)’는 서양 표현처럼 비핵화의 구체적 검증과 이행,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미가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가 회담 전 조속히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북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면서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과거에 비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지난해를 생각해봅시다. 최악의 상황 아니었나

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2~3개월에 한 번씩 한반도 위기론이 제기되었으니까요.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어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의 지평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두 달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렸고 놓치면 안 될 기회” 아닌가요. 보수, 진보의 양극화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거머쥐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 민족의식 의심치 않아 합리적 통일이라면 흔쾌히 동의할 것

❶ 이번 남북대화 과정을 보면 과거 기 싸움과 같은 행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남북 간 진정성을 느꼈다고 할까요.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9일 파리의 시앙스프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런 얘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면 분명히 좋은 화답이 올 것이라고. 이번 김영남, 김여정이 방남해서 느낀 게 뭘니까. 문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고 가식이 없고, 뒤에 복선을 깔아두는 그런 대통령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돌아가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외형적이고 호방하며 자기 자량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문 대통령은 아주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상대방에 과장하지 않으면서 접근하는 스타일이죠. 오히려 이런 대조적 성격이 음양의 조화처럼 잘 맞아 떨어진 것 아닌가 해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락 할 수 있었어요. 외교의 기본은 협상의 기술보다 진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분명 있습니다.

다. 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먹혔지만, 김정은에게도 먹혔다고 봅니다.

❷ 이번엔 통일문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를 둘러싸고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었죠. 또 북한의 예술단과 응원단이 왔지만 과거와 같은 큰 반향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규 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젊은이들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왜 독도 문제에 대해 그렇게 열광하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이 민족적 숙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단 통일의 방식이 그들의 개인적 이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잘 정리시켜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는 게 전부 흡수통일을 전제로 했어요. 북한의 급변사태→안정화→흡수통일이라는 방식의 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남북연합 방식의 ‘사실상의 통일’을 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여기에 충분히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❸ 남북 간 화해나 통일을 위해서는 결국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매우 중요할 텐데, 남북민간교류협력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남북민간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처럼 선민후관, 선이후난의 시각에 따라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민간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와 보수진영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1998년 창립한 이래 남남대화와 남북대화에 노력해온 민화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민화협이야말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조직 아닙니까? 때문에 여야,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해야 하겠지요. 또 이제는 독자적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구상해야 할 거예요. 그동안 민화협이 북한과 대화하는 수단,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컸는데, 이제는 민화협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현재 민화협의 북측 상대인 민족화해협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채널을 통해 민화협의 카운터파트가 북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화협이 남북관계, 통일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화협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민화협, 많은 이들을 위한, 이들에 의한, 이들의 민화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끝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략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평화 우선주의입니다. 통일보다 중요하게 평화입니다. 평화 없는 통일은 허구일 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작업,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공조입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을 위해 위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공용철 <민족화해> 편집인(왼쪽)과 문정인 특보

이죠. 그리고 4대 전략은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와 방어, 우리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이행해 나가면서 3개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술핵 반입을 포함해서요. 이런 신념하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행동 불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사전 협의와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 철학인 것이고, 저 역시 여기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 모두 핵문제 이상의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현안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은 남북이 같은 입장이예요. 우리에게도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든 핵문제를 해결해야 체제 및 국가 안보, 그리고 민생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요. 

남북관계의 틀로 들어온 북핵문제, 평창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이어가는 정상회담 되어야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 사회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대담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 대담

남북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평창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가 남북의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합의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흐름이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조건과 과제는 무엇일까? 최근의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진단해 봤다.

사회자 (박영호) 짧은 시간 안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올림픽 참여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단일팀 구성, 우리측 특사단 파견과 제3차 정상회담 발표까지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고유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휴전’ 개념을 적용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를 검토했고,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1·9 합의’가 만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지금 정세전환의 큰 계기가 됐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속도전식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것의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을 가지고 이른바 전략국가의 지위로 평화 공존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궤도에 ‘단번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속도전’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화해와 협력의 공정에 단번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다.

윤덕민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으로, 평화공세와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중국까지도 포함되는 강력한 국제제재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꺼

안은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공약에서부터 얘기하던 사항을 파고들어 남북관계의 르네상스를 열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거부하기 힘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제재를 흔들고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억제력 확보 자신감으로 대화공세 펴는 북한, 핵 있는 평화상태 경계해야

사회자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결정서를 통해 북한의 핵심 현안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전략을 세운 대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듯하다.

고유환 2013년 3월에 김정은 시대의 기본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 2016년 7차 당대회이다. 북한은 병진노선 채택 이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선평화협정이 이뤄지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는 아직 재진입기술 등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ICBM이 아닌 ICBM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전쟁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ICBM을 확인하는 실험을 더 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그 선에서 멈춰서 평화공세를 펴는 것이다.

윤덕민 고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북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파

키스탄처럼 미국 본토까지 가는 것은 포기할 수 있다. 그 대신 한반도용 핵무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묵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핵 해결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미국이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쪽에 대해서는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친절한 핵 있는 이웃이다’라는 모습을 선전한 것이다. ‘전쟁이나 평화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보통 평화를 선택하지만 그 평화라는 건 사실 질이 굉장히 나쁜 평화다. 그런 갈림길에서 북한의 전략은 미국과 담판, 그리고 핵 있는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틀 속으로 들어온 북핵, 한미 간의 소통과 협의 과정 더욱 중요

사회자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말씀해 주셨다. 북한의 특사 파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우리도 특사를 파견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번 특사단의 구성과 역할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고유환 과거와 다른 패턴이 하나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고 외교관계 전문가와 책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외교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고, 북핵문제는 북미현안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의제화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도 분리전략을 펴지 않고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핵보유국으로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북한 스스로도 이 문제를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추진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큰 진전이라고 본다.

윤덕민 지금까지 7차례의 특사단을 보면 대부분 정상회담과 관련된 특사교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회담과 더불어 비핵화 의제를 제기했음에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국의 중재역할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를 최대한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특사교환에 대해 한미 간의 소통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그런 협의와 소통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남북수뇌회담’이라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우리 대통령을 만날 때 수뇌회담을 하는 것이지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입장을 받으며 협의한다면 북한이 우리를 고려연방 속의 자치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

사회자 남북의 합의대로 된다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와 이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윤덕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바로 4월과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인지 모른다. 정부는 단순히 10년 전 10·4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again 2007년이 아닌 지난 10년간의 변화, 특히 북한의 핵능력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대다수는 남북합의를 환영하지만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과거 북한



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핵은 미북대화에, 우리는 남북관계에’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핵문제 해결에 철저를 기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남과 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 갖기로 한 데 이어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올림픽 휴전’에 따른 일시적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남측 대북특별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간접화법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남과 북이 예상보다 빨리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전쟁위기로 치달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 북한은 수령중심의 유일체제(수령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 지도자와 담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북핵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열쇠를 찾은 것이다.

사회자 북한은 미국에도 정상회담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북미대화 성사의 조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보인다.

윤덕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전기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모두 부담이 있을 것이고 결렬보다는 최종적 비핵화를 담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너무 흥분해서는 안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최종적 비핵화 합의를 여러 차례 북한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북한은 합의는 쉽게 한다. 그러나 이행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진전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리는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되풀이된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지만, 합의와 이행이 별개이었던 과거의 전철을 밟

지 않도록 이행에 초점을 둔 철저한 접근방법을 한미는 물론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고유환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미국에 구두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반신반의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비핵화로 가는 동결이라는 전제가 서면 북미협상이 되겠지만, 이 동결이 기존 핵의 인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미국이 생각하는 CVID 방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론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도 북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조건부 비핵화론을 폈다.

전쟁이나 평화나 이분법적 프레임 벗어나고, 성과있는 정상회담으로 국내적 공감 높여야

사회자 기존에는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풀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면 북한 핵문제도 남북관계랑 연동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윤덕민 북미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중재 또는 중매라는 표현은 굉장히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미동맹의 신뢰 속에서 북한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전략을 담아 접근해야 설득력이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UN결의안까지 채택하게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국민 오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당장에 미북 사이의 대화의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ICBM을 관리하고, 모라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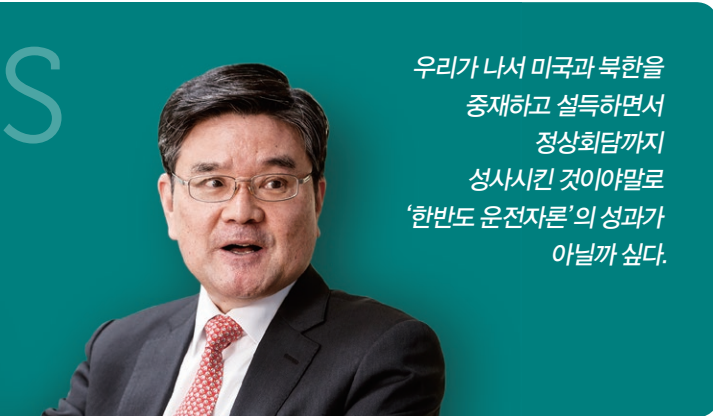
북미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중재 또는
중매라는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움(moratorium)하는 것이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천 발에 달하는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북대화만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도 우리 정부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줬으면 한다.

고유환 북한 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북핵의 위협권에 들어와 있었고 미국은 최근에 ICBM 때문에 위협권에 포함됐다. 우리만 위협권에 들어갔을 때 미국은 그냥 전

략적 인내로 지켜봤다. 그런데 자기들이 위협권에 들어가니까 최대의 압박 정책을 펼치고, 여기다 군사 옵션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평화다. ‘오직 평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군사적 옵션을 통한 해결방법은 우리로서는 용인하기 어렵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라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선 동결 후 폐기의 단계적·포괄적 북핵해법에 따라 동결입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부 대화파는 동의하고, 일부 강경파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특사단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듣고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위기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나서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것이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가 아닐까 싶다.

사회자 우리가 대북정책이라든가 한미관계와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결국 우리 사회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국내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가?

윤덕민 외교안보 분야는 굉장히 초당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북 대화가 열린다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 등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 가시화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요원하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미국이든 다른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우리를 향한 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쁜 평화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 전쟁이나 평화냐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전쟁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을 탈피하여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고유환 지금 정부는 이번 회담을 정권 차원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이 전쟁 위기가 나올 정도의 임계점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가급적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2030세대가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반발한 것처럼 국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의사를 확실하게 표출하기 때문에 내부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의도가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풍으로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다. 일시적인 ‘평창 평화’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

남북·북미협상의 지속 위해 다층적 교류협력·신뢰구축 필요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오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평화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과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북측의 ‘김여정 특사’ 카드는 파격적이었고, 남측의 특사 파견은 단번에 정세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뒤돌아보면 올해 신년사부터 정상회담 합의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올해가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 때마침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이 호기로 작용했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고위대표단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파견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으로나마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할 상대였다. 그런 측면에서 김 상임위원장의 방남은 향후 성사될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북한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을 서울에 파견하기로 했었다. 따라서 남북 간 합의 후 18년 만에 성사된 그의 방남은 김정은 위원장 방남을 위한 복선이었던 셈이다.

또 하나의 숨은 그림은 김여정 특사였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북한을 움직이는 노동당의 조직과 선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가 특사로 오면서 과거처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기싸움을 하

는 대화방식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가능했다

남북 고위급 만남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개막식 참석, 면담, 오찬, 만찬, 공동응원,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으로서는 김여정 특사 파견이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특사 파견 배경과 성과를 총화(결산)하는 내부회의를 열고, 향후 대화 방향과 교류 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귀환한 고위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금후 북남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했다. 북한 관계부서들의 정책조율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3월 5일 남측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후 3월 5일 정상회담 합의까지 과거와 달리 속전속결로, 특사 교환 방식의 공식 협의를 통해 이뤄진 셈이다.

북한의 평화, 대화공세의 의도

3월 5일 남측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한 지 3시간여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대화를 시작한 지 1시

간여 만에 남북정상회담부터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 조건부 수용까지 다 합의됐다. 북한은 큰 틀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든 현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과 민간 교류의 재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한지 6개월 만이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수용,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설립 발표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대남정책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남북 교류와 대화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데는 몇 가지 대내외적 환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압박과 ‘탐색적 대화’에 대응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평화 의제’로 대화를 모색했으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공식, 비공식 북미접촉을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오토 워비어의 사망, 김정남 사건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북한으로서는 강화된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와 평화공세에 나설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북한 내부의 대미, 대남 강경 입장을 내세운 목소리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미관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국가보위성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교체됐고, 인민군 총정치국도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군부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줄

어들었다. 내부적으로 ‘고립 탈피’를 위해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교·경제관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셋째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에 성과를 내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대정사’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이 올해 9월을 ‘대정사’로 맞이하고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미 ‘완성’을 선언한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로는 대체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든, 북한의 내부적 필요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든 북한의 올해 핵심키워드는 ‘경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립 탈피와 ‘평화적 환경’ 조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 마련의 한 축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북한으로서는 평창올림픽이라는 호기를 활용해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거쳐 워싱턴과 대화를 모색하든, 서울과 워싱턴 동시대화를 추진하든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은 북미·남북대화 병행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반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선택’보다는 정세 관리와 대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북한이 언제, 어느 계기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느냐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비핵화를 위해 5개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다양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층위의 당국회담과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

북한은 이 카드를 사용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 냈다.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천명하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향후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 북러·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남북 회담과 민간교류로 북미협상 촉진 필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이제 남은 건 북미 대화와 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비핵화 다자대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힘을 쏟아왔다. ‘3·5합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고, 북미 대화와 비핵화 다자회담만 돌파구가 마련되면 된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핵화 용의’ 표명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단 북미 대화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간의 ‘탐색적 대화’가 협상국면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구나 ‘비핵화 과정’

은 합의된 뒤 깨지기를 반복한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고,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만 남과 북이 이번에 합의된 정상 간 핫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중대현안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간다면 북미협상의 일정한 진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대화와 북미협상 국면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10년간 단절돼 있던 남북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압축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통해 화해분위기를 이어가고, 4월 말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후 바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군사당국회담 등을 개최해 남북 당국회담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직접 거론하고 서울시가 관심을 보여 온 경평축구와 6·15와 8·15를 계기로 남북공동행사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0·4선언에서 합의됐지만 성사되지 못한 남북 의원 교류차원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의원대표단을 서울에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북한 산림녹화 사업 등 대북제재 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북인도적 지원과 문화·체육 분야의 다양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층위의 당국회담과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정창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현대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

미국의 안보 위협하는 북한, 북미 간 점점 찾는 중간지대 역할 중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월 8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월 6일 저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간에 걸친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5개 항목에 이르는 내용 하나 하나는 한결같이 파격적이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던 북한 지도자와의 합의 사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확인해 준 부분은 그간 회의감이 가득하던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다시 한 번 희망을 보여준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든 부분은 3월 9일金正恩의 메시지를 듣고 백악관을 찾은 한국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북미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입장을 전격 밝혔다. 북한의 2018년 신년사,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및 대규모 공연단 파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을 찾은 북측 대표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포함되었을 때부터 북한의 파격적인 행보는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 당국자의 고민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역시 가장 궁금해 할 두 개의 질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행동이 급선회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전개된 남북대화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으로 연결시키는 소위 한반도 대화국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잘 진단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어려운 고차 방정식의 한반도 외교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 간 안보의 충돌 대비한 치밀한 전략 갖춰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위에 서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미국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진보 정부 시절에는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먼저 앞서나가 마치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미관계의 훼손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비치던 때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부의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훨씬 중시함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의 침식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비치던 때가 있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이기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북한과 미국을 함께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전략적 마인드와 능력이 있는가? 핵심적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 특히 대미 관계에서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해관계를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외견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확실한 것 같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안보이익과 남북평화 비전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국내 정치적 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흥미롭게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로 똘똘 뭉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형태로든 과거와 같은 대북협상 방식을 절대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가 없는 북미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행히 이번 남측 대표단의 방북에서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언급하는 성과를 거뒀으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 관련 대화의 수위 조절 및 주고 받는 딜(Deal)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타이밍까지 포함한 매우 정교한 의견교환이 향후 전개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대화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매우 분명한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물론 협상파의 리더로 알려졌던 틸러슨 장관이 전격 해임되고, 수도 워싱턴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새로운 국무장관에 임명된 점은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평화 조성과의 한·미·일

협력체제도 중요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모두가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 되었다. 미국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전제 조건을 제시할 북한과,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 사이에서 첫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차라리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과거와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북미대화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다. 어떻게든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미국과 당장은 절대 핵

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북한, 이 두 개 입장 사이에는 결국 일종의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한 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

둘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개 트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북한이 내민 예상을 뛰어넘는 협상 카드가 매력적이라는 이유에서 또 대화의 모멘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쉽게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남북대화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등 남북한 사이에, 또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수많은 합의를 경험한 바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과거의 많은 약속들은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이 보이는 파격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대략 6개월 후로 예상되는 매우 힘든 경제 제재 효과가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작년 말 이후부터 그야말로 심상치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액션 카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폭탄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백악관의 모든 나침반은 올 11월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다.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록, 트럼프 정부에게 외교적 위기 특히 북한 문제는 매우 매력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보다는, 보통 사람들과 세계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핵심 세력만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미국과의 제재공조 전열을 흐트러트려서는 안 된다. 대화와 제재의 두 개 트랙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은 북한을 괴롭히자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높은 가치를 중시하며 언젠가는 남북한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반도 평화공동체라는 커다란 집을 지어야 할 공동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남과 북은 서로 해결해야 할 안보 차원의 숙제가 있고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약속해야 할 신뢰의 수준이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만 할 것이다.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 전략에서 미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조체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 기회일 수 있다. 차제에 형성된 남북대화가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될 수만 있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일이 각자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젠다를 미국과 일본에게 확실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안위, 세계평화의 보편적 원칙으로

남북문제 풀어가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문재인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춘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보편적이고 견고한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불과 얼마 전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다시피, 현재 우리

국민들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연습과 금강산에서의 사전 행사라는 아이디어에 그다지 감동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교훈으로 잘 새겼을 것으로 믿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믿는다. 또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 평화의 보편적인 원칙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또한 믿는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평창 이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차제에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대화 수준과 틀을 만들어 놓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의 다양한 대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그 어느 쪽도 뛰쳐나가지 않도록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동원하여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적어도 현재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우리의 모든 정책은 실패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각 정부가 남긴 교훈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간의 대북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뢰의 사인은 주고받되 확실하게 검증하라는 것이었다. 허심탄회하게 나온 북한을 무작정 의심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성과라도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최대의 관건이다. 이제 막 꺾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첫 단추가 평화정착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반도 안과 밖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박인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

평창을 통해 본 국민들의 통일·북한의식 차근하게 평화논의 시작해야

조영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8년 1월 민화협이 발표한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공론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북관계나 통일 관련 남북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69.9%를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인식의 차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71.3%로 높게 나타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나타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6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느냐 적대대상으로 보느냐에 있어 전체적인 응답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인식의 결을 보여주었다. 20대와 30대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각각 17.7%, 16.7%로 40대 13.1%, 50대 11.8%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있어서도 20대 24.1%로, 30대 29.6% 등 다른 세대에 비해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

구원의 조사가 민화협의 조사와 다소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인식의 차이는 지난 9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와 그 사이 이루어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평창, 한국 사회를 비추다

그동안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는 실현되었다. 사실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지점들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한 찬반 입장, 올림픽 참여 절차에서 제약이 되는 대북제재의 문제, 응원단과 공연단의 공연 내용에 대한 논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갈등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민화협의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했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질문에서 응원단 운영에 대한 찬성이 74.5%, 예술단 공연 찬성이 65.5%, 개회식 공동 입장 찬성이 63.3%, 한반도기 사용 찬성이 51.0%였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37.7%, 반대가 58.7%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응원단 운영이나 예술단 공연 등과 같이 비정치적인

부분은 찬성 응답이 높지만, 한반도기 사용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 입장이 대립되었다. 단일팀 구성의 문제는 남한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해 소위 ‘젊은’ 세대라 불리는 20대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통일 의식이 없거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물론 이들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왜 낮게 나타나는가라는 점이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체감할 기회가 없었고, 미래의 통일보다 현재 내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를 탓할 수만은 없다. 불공정한 기회와 결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나타난 갈등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결국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평창올림픽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평창 그 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

평창올림픽 개최 전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평창올림픽은 대북특사의 방북 후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합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남겼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측면이 있었다. 2016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에서는

//

평창올림픽에서 이루어진 남북한의 만남은 대화와 만남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매우 또는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이 40.5%였고, 유보적 입장이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2017년 8월 조사 결과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앞서 민화협이 조사에서도 북한의 참여가 올림픽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그리 높지 않았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린 후에는 평창올림픽 효과에 대해서나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긍정 63.4%) 부정 32.8%, 『월간 중앙』, 2월 11일), 평창올림픽 효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남북관계 좋아질 것 70%, 「경향신문」, 2월 15일자).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재개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관련하여 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리서치조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찬

성한다는 응답이 77.4%였고(「경향신문」, 2월 15일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뉴스」, 2월 15일자). 이처럼 평창올림픽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환기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추진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도 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들이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남북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나 갈등이 더욱 불거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동안의 경험상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가 커진 만큼 성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내기에는 평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너무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탁월한 외교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지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들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공론의 장을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열어야 할 것이다.

평창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이것이 평창이 남긴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 듯하다. 평창올림픽에서 이루어진 남북한의 만남은 대화와 만남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

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책으로만 배웠다. 실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남북관계의 경색과 침체의 시기를 겪어온 시간이 더 길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의 성과도 체감하지 못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오래되다 보니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화가 평화를 만든다는 점을 잊게 만든 측면이 있다.

지난 정상회담과 남북대화가 이루어왔던 성과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가 지금인 듯하다.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남북한 주민의 접촉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충분히 기여해 왔던 경험과 역사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당국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민간의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기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의 우리 사회 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조영주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Issue & Focus  2018년 북한 경제 어디로 갈까?

높아진 대외의존도, 대북제재 장기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제재가 장기화 될수록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는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북한경제가 대외적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북제재는 처음에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제한적 조치에 불과했지만 여러 차례의 UN 안보리 결의를 거쳐 이제는 충분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로 발전했다. 북한경제의 개방도는 일반적인 개발도상국보다는 한결 낮다. 하지만 필수 수입 물자의 자체 생산능력이 부족하므로 대외무역의 질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재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 시일이 흐를수록 부정적 충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대북제재에 본격 동참

2년 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국면이 시작될 때에는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재 내용은 UN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지만 중국이 이를 어떻게 집행할지가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중국의 제재 집행 정책이 제재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UN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광산물 수출 제한 규정에 민생용 예외 조항을 두면서 민생용 판정 기준은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산 광산물 수입 대부분을 중단할 것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수입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UN 제재는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11월에 나온 UN 안보리 결의 2321호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민생용 예외조항 없이 상한선을 부과하여 중국의 재량권을 없앴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이 연이어 벌어진 후 2017년 8월, 9월, 12월에 나온 UN 안보리 결의 2371, 2375, 2397호에서는 중요한 제재 조치들을 계속 추가했다. 북한의 상품수출 대부분과 일부 중요 상품(전기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 등) 수입이 금지되었고 석유제품 수입에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 중단,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 2년 내 송환 같은 중요한 규정들이 부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북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수입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8년에는 대외무역 감소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정책을 바꾸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데 동참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과연 UN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집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구심이 있지만, 설령 100% 완벽하게 집행하지 못해 제재의 구멍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광산물 수출은 추적 및 감시하기가 쉬우며 주요 상품 수입 역시 어렵지 않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시 능력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제재를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지금까지처럼 강력한 UN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UN 안보리 결의의 채택 자체가 중국의 정책이 제재를 적극 집행하는 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 감소가 내부경제에 주는 충격 커

제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북한당국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경제 자립도가 높다면 그럭저럭 버틸 만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제재로 인한 대외무역 감소가 내부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로 인한 대외무역 감소는 일차적으로는 북한당국이 관리하는 국영경제 부문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따라 대외무역은 국영 무역회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

//

제재가 충분히 완화 또는 해제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므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협상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으며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상품의 소비자도 국영기업이다. 물론 오늘날 북한경제는 공식 제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거나 준(準)공식적인 시장거래도 활발하며, 이런 사정은 대외무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대외무역의 주요 부분은 여전히 당국이 관리하는 국영부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출입이 금지된 주요 상품들은 더욱 그러하다.

물론 더 이상 외화수입이 없더라도 이제까지 쌓아놓은 외화보유액이 충분히 많다면 상당 기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UN 안보리는 이런 사정까지 생각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중요 상품 수입까지 금지해 버렸다. 수입 금지된 상품은 전기전자(휴대폰, 가전, 컴퓨터), 기계류, 철강 금속, 자동차 등으로 모두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들 상품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영기업 설비투자 및 각종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교통과 통신 사정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조치는 수송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제품(디젤유, 휘발유 등)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의 소량으로 제한해 버린 것이다. 원유 수입은 현행 물량이 유지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즉 석유제

품 수입 제한은 북한의 운수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내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운수는 어느 경제에서나 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제재는 국영경제 부문에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비공식 사경제 부문과 시장 거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국영경제와 사경제는 어느 정도 연계를 맺고 있으며 수입상품 중 상당 부분은 시장으로 흘러나온다. 따라서 대외무역 감소는 시장거래의 위축과 시장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수사정 악화로 인해 내부생산 상품의 시장 유통과 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재가 장기화되면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여타 상품의 수입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특히 식품 및 소비재 수입 감소로 중상류 이상 계층의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사정 악화와 시장거래 위축으로 일반주민과 취약계층 역시 생활수준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대외무역 감소가 북한 내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물량의 상품을 미리 수입해 놓았으므로 당분간은 비축해 놓은 물자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 아마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제재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시일이 흐를수록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준의 급격한 경제 붕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가 지나치게 고조되면 북한 붕괴를 꺼리는 중국이 제재 강도를 어느 정도 낮춰 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경험하다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 및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그동안 대외무역 혜택을 많이 보았던 엘리트 집단의 생활수준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며,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와 정치적 동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수동적 저항과 사회정치적 규율 약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것이 다시 경제위기의 심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은 대외정책을 크게 선회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속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제재의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제재가 충분히 완화 또는 해제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므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협상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낙관적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북한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위기는 경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정치적 차원으로까지 퍼져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재 장기화되면 정치경제적 위기 심화

시장화 추세와 국영경제 개혁 시도에 따라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 비해 많이 유연해져 있어 지금의 제재가 단기간 내에 ‘고난의 행군’

김석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연구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북핵 해결 과정 속 러시아의 이일대로(以俟待勞)

정의길 한겨레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Russia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진 첫 한러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둔 러시아의 입지와 입장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제재 강화 동참을 요구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푸틴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한다”,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 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한다”,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한다”라는 등의 말로 러시아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는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그 핵개발 문제에 대해 보여준 일관된 입장이다. 첫째, 러시아는 북핵에 대해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으론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 셋째, 러시아는 인도적 지원 등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푸틴은 2012년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북한의 핵보유 불용, 정치·외교적 해법,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명확히 했다.

북한에 대한 개입력 여전한 러시아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나, 북한에 대한 개입력에서는 중국에 비해 현저히 뒤진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북핵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면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북



지난 해 11월 3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의 단장인 러시아-북한 의원친선그룹 간사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 등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

핵 문제에서 러시아가 다른 차원의 지렛대를 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간헐적으로 수행해왔다.

러시아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한 사실이 드러난 2002년 2차 북핵 위기 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 개입과 조정에 나섰다. 러시아는 당시 ‘일괄타결안’(package solution)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대북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차 북핵 위기를 거치며 북핵 문제 해결 틀로 6자 회담이 만들어지고, 러시아는 이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한 당사자로 복귀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2005년 9·19공동성명 실현이 홍콩 방코텔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에 대한 미국의 동결로 진전

을 못 보자, 러시아는 직접 나서 이 자금의 중개를 맡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강화되는 대북제재를 거치며, 북한은 더욱 고립됐으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레버리지 역시 줄어들었다. 러시아-북한 관계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크게 후퇴했으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1억 달러로 북중의 70억 달러에 비하면 약소하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한 수출의 3분의 1은 러시아산 제품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석유 및 연료 관련품들로, 북한에게는 필수품이다. 러시아는 또 북한 노동력의 최대 수입국이다. 약 2만 명의 북한 ‘초대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며, 이들의 송금은 북한 정권에게는 최대 경화 수입원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BDA 자금 중개를 기꺼이 떠맡아 준 것도 양국 관계의 오랜 인프라에서 나왔다. 러시아 내에는 여전히 북한과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회색 지대나 비공식 자금 이체가 존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는 사활적인 금융 통로이기도 하다. 양국 관계의 인프라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철회되면 신속히 회복될 잠재력이 가장 크다.

소련 시절의 국제적 위상 회복 원해

대북한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거부한 데서 드러나듯, 푸틴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개입력 유지에서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런 입장은 푸틴 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 소련 시절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전략에 바탕한다.

첫째, 소련 붕괴 이후 보리스 옐친 집권 시기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던 한반도 등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을 복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과 제재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유지함으로써,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과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게 북한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세력의 확장을 막는 완충지대이다.

둘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유지하는 것은 북핵 해결 이후 동북아 상황에서 러시아를 최대 수혜자로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베리아 및 연해주 개발이 장밋빛 청사진만 무성하고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 상태 때문이다. 북핵 해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특히 한국으로까지 이어

//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다투며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장에 나설 시기가 된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일대로(以佚待勞)라 할 수 있다.

//

지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가스관 부설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는 남·북·러 삼각경협, 극동시베리아 및 연해주 개발로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장시킬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지정학적 과제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시리아 내전 사태에서도 북핵 문제는 러시아의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개발 진전으로 갈수록 대외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미국에게 러시아의 협조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의 대러시아 외교 '리셋' 정책,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양국 관계의 악화로만 귀결되어 왔다. 시리아 내전과 북핵 문제는 푸틴에게는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들이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이런 입장과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중국의 대미관계에 비해 구속력이 덜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이 덜하다. 러시아는 또 동유럽이나

중동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플레이어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도 미국의 북한 압력과 제재를 견제하는 데 외형적으로는 더 강한 태세이다.

한반도 개입의 딜레마 극복할 수 있나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뿌린 씨앗이기도 하다. 소련 시절의 지원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고, 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의 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로 질주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개입력에 비례한 역할을 북핵 협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가진 지정학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확실히 손에 쥐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놓아버리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큰 존재였다.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동유럽이나 카스피 지역 등에 비해 지정적 가치는 떨어지나, 열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었다. 또 러시아의 중심 모스크바에서 가장 먼 접경 지역인 한반도의 위치는 러시아의 영향력 전개를 막는 요인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이런 딜레마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불연속적이고 불균등하게 만들고, 그 영향력 확보를 제한했다. 러일전쟁, 소련의 태평양전쟁 참전과 북한 지역 진주,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한국전쟁에 대한 거리두기, 중소분쟁 당시 대북한 관계의 등락, 1990년대 초 한국과의 일방적 수교, 소련 붕괴 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상실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개입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남북한 접촉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 입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러

시아는 이런 상황 진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사태 진전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북핵 문제에서 한 당사자가 되어버린 중국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건설적인 중재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노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오는 5월에 만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한반도에는 전례 없는 북핵 타결과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의 해법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4대 열강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는 체제 안전 보장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4대 열강 사이에게는 일종의 세력균형 체제이다. 평화협정 성사 등으로 이 체제가 안정적인 공존체제로 정착되는 것은 4대 열강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북한의 교섭력을 뒷받침하면서, 한반도에서 4대 열강으로서의 전통적 영향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다투며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장에 나설 시기가 된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일대로(以佚待勞)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개입력을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유지하다가, 오랜 대치와 협상에 피곤해진 당사자들을 상대하는 전략이다. 푸틴의 러시아가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정의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부국장, 국제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부 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하나 되는 태권도, 통일 코리아의 시작입니다!

김 일 출
세계태권도연맹 제1사무차장



“민족의 자긍심이자 숨결인 태권도가 본디 하나이듯, 지금은 나뉘어져 있는 남북 역시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태권도를 통해 한민족의 기백과 위상을 세계에 떨친 것처럼, 이제 남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세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면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긴 남북 태권도합동시범공연 그리고 그 물꼬를 트게 했던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북한 선수단 참여까지 총괄 실무를 맡았던 숨은 주역이 있다. 바로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제1사무차장이다. 태권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느낄 수 있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리·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김도형 객원작가

김일출 사무차장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대학시절 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입대해서는 대북방송 원고집필요원으로 활약했다. 덕분에 노동신문, 내외통신 등 북한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시절에 이미 ‘이산가족의 재회와 선결문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그는 졸업 후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남북문화의 이질성 극복’ 등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때문일까. WT의 사무차장으로 남북 태권도합동시범공연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 관계자들과 만날 때에도 큰 어려움이나 이질성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북측 관계자들은 “김 선생은 이제 제 눈만 봐도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라며 친근하게 다가왔다. 김일출 사무차장은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때론 이념보다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온 세월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주에서 뿌린 씨앗, 평창에서 꽃피우다

그의 경력은 다채롭다. 국회 비서관, IT업체의 CEO, 언론인,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등. 셀 수조차 없다. 그러다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마케팅 특보로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2009년부터 사무차장을 맡아 굵직굵직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 해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는 북한 선수단의 영접부터 환송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다.

“당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간 행사가 열리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정부도 바뀐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나 시스템이 없었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남북 협상스테이블까지 참여하게 되었어요. 북측 관계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전체를 총괄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북측 실무자, 남측 실무자 할 것 없이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남북 태권도합동시범공연을 평창에서도 이어지게 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주에서 뿌린 씨가 평창

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실 평창올림픽 때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안 오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은 있었지만, 태권도 시범단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적어도 태권도를 매개로 한 남북의 신뢰는 쌓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평창을 찾은 북한 국제태권도연맹(이하 ITF) 선수단은 남측의 WT 선수단과 함께 멋진 시범공연을 펼쳐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다시 한 번 받았다. 태권도를 통해 남북의 화합과 우정을 보여준 멋진 무대였다.

통일 코리아를 위한 남북 태권도 교류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의 태권도를 두고 왜 남측의 WT와 북측의 ITF로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해 한다. 김 사무차장의 설명을 빌리면 ITF의 발상지는 북이 아닌 한국이다. 1966년 서울에서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육군 출신 무술가인 최홍희 장군에 의해 결성되었다. 하지만 그 후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최홍희 장군이 캐나다로 망명하게 되고, 이후 ITF를 데리고 북한으로 가게 된다. 한편 남측은 그 후 1973년 김운용 총재가 중심이 되어 세계태권도연맹 즉 WTF(이후 WT로 변경)를 만들게 된다. ITF는 이후 몇 차례로 나뉘졌는데, 현재 WT가 교류하고 있는 곳은 장웅 ICO위원이 총재를 맡은 바 있고, 현재 리용선 총재가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F다.

“WT와 ITF는 2014년 난징 유스올림픽 때 역사적인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주선하고 조정원 WT총재, 장웅 당시 ITF총재가 맺은 것입니다. 내용은 남북 태권도합동시범단 교류의 정례화, 해외 주요 도시 순회 합동시범공연 개최, 그리고 WT의 깃발 아래 ITF의 올림픽 진출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 의정서에 따라 두 국제기구가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평창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WT와 ITF라는 두 국제기구 간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원조다, 누가 더 진정한 태권도냐 등의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ITF는 무도 태권도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태권도는 글로벌 스포츠화, 경기화에 주력해 온 것이죠. 단지 발전해 온 방향이 다를 뿐이죠.”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두 기구 간 교류와 협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의 6월 합동공연을 논의하고 있다. 또 남북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해외합동순회 공연과 ITF의 WT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김 사무차장은 국제 스포츠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일이 많다고 강조한다. 우슈, 가라데, 삼보, 주짓수 등 세계 유수의 전통 무도들을 이기고 올림픽 무대에서 우뚝 서야 하는 태권도를 위해서라면 ITF와 WT는 적극적인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을 통해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WT가 ITF와 협력하여 통일의 마중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WT의 총재가 한국인이고, 본부가 한국에 있으니 남북 태권도의 교류와 단합이라는 소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맹 총재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본부가 한국을 떠날 경우 에까지 이런 일들이 가치 있게 지속될지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WT는 209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재를 선출한다. 본부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유지하고 있다. 철저하게 IOC가 주는 배당금과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에 있는 배드민턴 연맹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치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직원들도 준외교관 지위를 받고 있다. 김 사무차장은 태권도가 앞으로 남북통일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나 관계 기관들이 WT의 존재방식이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만남의 정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김일출 사무차장은 남북 스포츠 교류와 태권도 교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태권도 역시 물론 스포츠지만, 태권도는 남과 북 사이에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한민족에 있어 국기이고 민족의 정신, 혼이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만난 인연은 평생을 이어가게 된다. 2017년 무주에 왔던 북측 단원들도 평창에 다시 왔다. 설사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진다. 또 태권도가 갖는 동질성, 우리 한민족의 것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김 사무차장은 무주 대회 때 행사를 찾아온 한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어쩌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일의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는 노력한다면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남과 북의 태권도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하던 통일이 아니고 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 가능케 할 것이고, 태권도의 통일을 통해 두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아울러 남북 태권도의 통합은 한 스포츠에 한 국제기구인 IOC 입장에서든 굉장히 바라는 바고, 태권도의 무도성 회복과 가치나 재미를 더 높이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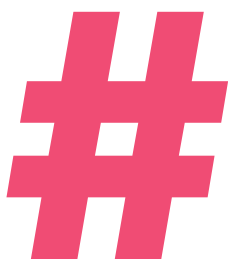
통일을 생각하면 먼저 남북의 다른 체제, 이념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사람과 사람 사



지난 2월 14일 MBC상암홀에서 태권도합동공연 후 남북의 선수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하고 있다.

이가 세월이 중요하지 이념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번 방북단 중 북측의 한 실무자가 헤어질 때 저에게 그러더군요. ‘선생님과 저는 눈이 닮았어요. 선생님과 제 눈은 눈물이 많은 눈이에요.’ 사람 사이는 정과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은 때론 철조망을 넘는 것이예요. 우린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을 이야기해왔어요. 분명 남북이 체제가 다르고 또 갈등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우리 규모에 맞는 경제여건도 확보할 수 있고, 남북이 서로 없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후세들이 살아가는 더 좋은 일터,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지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이 득인가 실인가 따지는 것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통일이 가져올 이혜타산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싶어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을 줄인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이 다하는 날까지, 태권도를 통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힘쓰겠다는 김일출 사무차장. 스스로 태권도를 배운 ‘태권도인’은 아니라며 겸손해 하지만, 분단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그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무도인은 아닐까. 남북 태권도의 만남이 다시 기대되는 봄날이다. 🌸



MeToo & Unification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분단과 통일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족화해〉는 이번 호부터 평화와 통일, 분단 문제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탈피해 새로운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각계 전문가의 이야기를 담아 〈뉴노멀, 한반도 평화〉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편집부)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몇몇이 용기 내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지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고통 받아 온 여성들의 증언이 붓물을 이루는 현 상황에서 또 다시 국가와 분단, 그리고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국가 중심적 사고방식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을 장악한 군사주의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 다다른다.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성별구조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우월감에 익숙해져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우위의 시대라는 비아냥거림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세계 118위의 성차별지수가 말해주듯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구조는 공고하기만 하다. 게다가 남성우월적 문화는 사회구조 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 더 잔인한 폭력의 형태로 확장되어 왔음이 작금의 상황으로 증명되었다.

분단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 불평등

사실 서구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몰고 올 것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마도 한국사회 이면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로 일상적이며 전방위적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존경받아온 문화예술계의 거장부터, 진보적 정치인과 종교인, 영향력 있는 학자까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이들의 동물적 폭력성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오만은 인문학적 소양, 정치적 입장, 종교성, 더 나아가 그들이 지닌 권력

의 크기를 뛰어 넘어 작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폭력성은 도대체 어디에 근원을 둔단 말인가. 절망스럽게도 그들에게 각인된 여성 일반에 대한 절대적 우월감과 자만심 말고는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 비판적인 사실은 이러한 성폭력이 단순히 유명 권력자 몇몇의 일탈적이며 범죄적 행위가 아닌, 여성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생에 한번은 겪어 볼 직한 공통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민이 광장에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성취해냈으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불평등하며 폭력적인 관계가 성과 젠더의 영역임을 나타낸다. 민주화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이 등장했으며, 산업화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을 탄생시켰음에도,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과거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역사 발전의 수혜자는 남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았던 여성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물론 이러한 비틀어진 구조에 대한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분단이다. 즉,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적 사고방식과 성폭력 문화의 근원으로 전쟁과 분단체제가 생산한 상시적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의 비틀어진 성문화는 가부장제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근대사회가 도래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공고해진 가부장제는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화와 규범이라는 외피를 쓴 채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성의 절대적 권위를 공고히 해왔으며, 이들에 의한 여성 지배를 정당화해 왔다. 주지하듯 전쟁은 수많은 부작용과 사회의 퇴보를 견인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 상황에서

가장 위협받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는 쉽게 소거되어 왔다. 몇 년 전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전쟁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그들만의 경험을 재현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전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전투의 승패, 허무맹랑한 무용담, 전쟁 영웅의 장엄함 따위만을 기억하곤 한다. 반대로 여성은 전쟁에 짓밟혀버린 피해자로 단순화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머무른다. 이러한 역사 기억은 전쟁에서 ‘싸운’ 남성에게는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위치하게 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단과 통일 사유해야

더욱 문제적인 것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되지 않은 채, 휴전이라는 다소 비정상적인 상태로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곳인 터라, 군대와 국가는 어느 어떤 나라와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한 힘을 휘둘러왔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심해지면 질수록 국가와 권력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는 ‘비상사태’ 상태를 선포하며,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을 막아왔다. 여성 권익 신장을 주장하는 것이나 부정의한 성문화에 대한 반발 등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가적 위기 사태를 들먹거리며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으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생산한 강력한 군대와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집 제도는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한국남성의 절대적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군대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남성 카르텔의

한 부분으로 단순히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가리키듯 군대는 단순히 한국 남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여성을 ‘사람’이 되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게다가 군대는 단순히 징집되어 있는 그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회 전반에 군사주의적 문화를 퍼뜨리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이나 직장 내 자유롭고 탈권위적인 소통이 어려운 것부터 개인보다는 집단, 더 나아가 공동체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태도,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비틀어진 성의식까지도 한국사회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군사주의적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분단체제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젠더나 가부장제와 같은 일상의 문제는 항상 ‘개인적인 것’으로써 정치의 영역 밖에 존재해왔다. 국가의 안위가 한국사회에서 절대적이면서도 규범적 위치를 선점하면서, 사회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구축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도 확인되는데, 권위주의 독재에 대항하기에 급급했던 민주 진영 스스로 ‘민주’라는 범주에 걸맞은 성평등 의식과 젠더 감수성 발전에는 주저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제도적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는데, 역시 그 큰 부분은 ‘분단’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악화일로로 걸어 온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의 안보위기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군사문화와 국가주의를 지속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제도권 정치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작동 원리 자체에 근본적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와 집단의 논리 앞에서 숨죽였

던 수많은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는 단순히 몇몇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와 작동에 반기를 든 새로운 주체들의 정치화 징후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시금 분단과 통일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껏 분단은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조망되어 왔으며, 통일 역시 ‘국가’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안적 담론으로 논의되는 ‘평화’조차 안보적 측면에서의 전쟁 혹은 위협 없는 상태로 협소하게 정의되면서 여전히 국가 중심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물론 분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이며, 한반도라는 지정학을 둘러싼 국가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분단 극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새로운 주체들이 요구하는 분단 해소나 평화는 단순히 국가 수준의 ‘통일’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변혁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지금이야 말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다시금 사유해야만 하는 이유다.

분단의 굴곡 극복 위해, 이제 다시 원칙과 근본을 돌아보자

최근 학계의 몇몇은 여성주의를 내세워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안보 논의를 비판하면서, 안보의 개념을 구조적·물리적 폭력이 작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안보의 주체인 국가가 바로 폭력의 주요 행위자였음을 지적하면서, 근대국가 그 자체를 문제시 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수많은 개인, 특히 전쟁이나 분단으로 폭력 앞에 노출된 여성을 적극적으로 역사의 장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국가까지도 문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논의, 더 나아가서는 평화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한 대화는 이제 북미 간의 대화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북 특사단이 이끌어낸 북미 지도자 간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갑작스런 희소식 앞에서 곳곳에서 기대에 찬 전망이 가득하다. 간간이 들려오는 정치권의 우려는 알뜰한 셈법에 머물러 있고, 낙관주의자들은 과거의 통일 프레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일과 분단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변혁의 시대에 평화 한반도라는 미래 비전이 여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틀에 머무를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새로운 시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시적 평화라는 명분으로 일상의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극복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과 근본을 다시금 되새기는 일일 것이다. 만약 분단 극복이 궁극적으로는 분단으로 비틀어진 사회 구조의 복원이며, 분단이 생산해 낸 부정의한 권력을 남북의 시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조금은 더 근원적인 사고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분단 극복의 과정과 그 결과는 계급, 계층,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젠더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만 한다. 분단 너머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적어도 폭력만은 용납되지 않는 세상일 테니 말이다. 🌈

김성경은 영국 에섹스대학에서 문화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와 싱가포르국립대학을 거쳐 2014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이탈주민, 마음의 사회학, 통일&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음악정치’로 본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평화의 절실함에 공감한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천현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2월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서 가수 서현이 함께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네 자란 보금자리 이 땅이 하도 좋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녀원 안고
비둘기야 비둘기야 더높이 날아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해쑹는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한나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사회주의 미학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개인의 감상에 머물지 않는다. 북한에서 음악은 개인을 포함한 집단 교양과 선동 수단이고 문화정서를 높이는 수단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일상보다 정치, 경제적 현실을 더 많이 다루며 그러한 집단의 가치를 다루는 음악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에 ‘음악정치’가 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삶의 질서라고 보면 음악이 정치와 연결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불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나 탄핵 정국 때 촛불 집회에서 불린 〈민중의 노래〉(레 미제라블)도 정치적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에서 벌어지는 음악적 사건의 차이가 북한의 ‘음악정치’를 특별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음악정치’는 음악으로 정치를 말하고 정치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치적 ‘내용’을 음악적 ‘형식’에 결합시켜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북한음악의 실제에서는 여러 단계와 방법들로 적용되고 있다.

음악 매개로 정치와 생활 일체화, 사회통합 추구

북한이 추구하는 음악정치의 본질은 단순히 음악에 정치적 내용을 담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음악정치의 본령은 음악을 매개로 정치와 생활을 일체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을 매개로 정치와 경제생활을, 정치와 노동생활을, 정치와 외교활동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음악정치가 추구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공연장을 공장이나 농장, 광장, 학교, 운동장, 가정 등 일상생활 장소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경계를 상실케 하는 것이 음악정치의 목표다. 북한의 노래와 음악, 특히 북한의 공연은 하나의 이야기다. 사건과 줄거리가 있는 서사(敍事)다. 그것이 특정한 이야기의 대본을 갖는 음악극이 아니라 개별 노래와 음악, 무용 등의 종합예술 형태라 하더라도 북한의 공연은 사건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그 이야기는 불특정 개인의 감정이나 일상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연이 열리는 시공간의 현실을 반영해 그 의미에 맞는 전형(典型)을 선택해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 함은 우연한 개인의 비본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음악정치의 운용은 집단주의 사회주의국가로서 사회통합의 기제로 음악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 사회통합의 첫 번째 방식은 이성애 호소하는 공식적 교육이고 두 번째 방식은 감정에 호소하는 비공식적 교육으로서 문학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통합의 완성은 감정의 통합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착목해서 음악정치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사회의 일체화, 즉 일정한 내구성과 향상성을 가져온 밑바탕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평화의 노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통일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이런 북한의 음악정치가 갖는 의미로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음악을 매개로 정치와 외교활동을 일체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공연장과 평창의 경계를 상실케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 자체를 분단된 남측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현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공연 역시 사건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공연의 노래 제목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공연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개별 노래들을 음악적 특징에 따라 선정하고 임의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연의 정치적 의미를 염두에 두며 주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사와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곡목들을 확정짓는 것이다. 북한의 공연에서는 가장 먼저 공연의 주제와 메시지를

정하고 곡목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로서 남측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남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연결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곡이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와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다. 물론 남한의 노래를 12곡이나 부른 것과 세계 명곡을 23곡이나 부른 사실은 남한에 과감히 손을 내민 것과 함께 세계를 향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북한의 뜻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의 주요 메시지는 위 두 곡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 그 메시지는 첫 머리에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의 ‘평화’, 뒷부분에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의 ‘통일’이다. 평화를 디딤돌로 삼아 통일로 나아가자는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공연에 담아냈다. 이러한 해석은 단지 선곡된 노래의 제목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는 본래 제목이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다. 물론 이 노래 전체의 뜻이 그렇고 3절 가사에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본래 제목에 부제 ‘평화의 노래’를 달아 무대자막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공연에서 이런 경우는 이 곡밖에 없으며, 그 밖의 다른 북한음악 공연에서도 제목 자체를 변형시키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히 의도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절 가사에서도 ‘평양’을 ‘이 땅’으로 바꿔 평화를 바라는 공간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을 포함하는 한반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가는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평화, 크게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은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르는 의례성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다시 만납시다> 전에 배치한 이 공연 순서

의 절정이다. 특히 서울 공연에서는 이 곡을 삼지연관현악단의 단장 현송월이 직접 부름으로써 강조했다. 그리고 3절의 ‘태양조선’을 2절의 ‘우리 민족’으로 바꿈으로써 노래에서 말하는 통일이 한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체가 남측의 요구였고 북측이 이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더 뜻깊었다. 또한 1절 가사의 ‘제주도 한나산도 내 조국입니다’를 ‘한나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로 바꿈으로 해서 남북 공통의 민족적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공연에서 가사를 바꾼다는 것은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 지난 2015년 현송월이 단장으로 있는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이 총연습을 마친 상태에서 취소된 까닭이 체제 선전 가사를 가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가사를 바꾼다는 문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번 공연의 곡목 선정과 가사 교체 등은 북한 응원단이 남한 선수들의 경기 때도 응원을 펼치거나 김여정 선전선동부 1부부장이 개회식의 남한 애국가 연주 때 일어나 예를 표했던 것에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한 남북교류의 의미를 충실히 실천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통예술 분야와 함께 윤이상 매개로 하는 현대음악이 접점 될 수 있어

이번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으로 북한이 남한과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자체는 ‘평화’와 ‘통일’ 두 가지였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압박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태임은 분명하지만 원칙적으로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가 당장 중요함을 알고 있고 남북한

이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북한의 최고 실력자들이 참여했고, 그것을 기회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의례성 공연의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공연을 교훈 삼아 향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는 힘들더라도 공연 전체의 의의와 주제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의 곡목을 선정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류 자체의 성사를 위한 주고받기식의 곡목 선정과 일회성의 공연이 되기 쉬울 것이다. 남측의 단독 공연이더라도 북측과 함께 공연의 의의와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정은 더 쉬울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가 쌓이면 합동 공연 등 더 높은 수준의 교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선은 이질적 분야가 아닌 공통의 소재와 영역을 위주로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성과를 쌓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족하지만 그 동안 교류 경험이 있는 전통예술 분야와 함께 윤이상을 매개로 하는 현대음악이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중시하는 북한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북한이 전통을 재구축하고 서양음악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남한이 될 수 있고, 남한은 북한의 민족음악과 ‘우리식 양악’의 성과를 새로운 한국음악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목표에 맞춰 서로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을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문제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이웃이 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천현식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을 춤추다' 플래시몹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통일·평화·시민 새로운 통일교육을 꿈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빛을 보고 있다. 북한의 거침없는 핵전력 강화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 앞에 금방이라도 한반도가 전쟁의 불길에 휘말릴 뻔했던 몇 달을 지나, 이번에는 또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뒤에 이어지리라 싶은 남북화해무드, 그리고 통일 논의에 대한 기대가 꽃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주어야 할까.



‘통일’이 아니었던 통일교육에서 현재까지

통일은 헌법 전문과 본문 4조에 명시된 국가적 사명이다.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뇌리에 새겨져 있는 지금의 기성세대에게, 통일교육이란 참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북진통일’이 통일정책 아닌 통일정책이었고, 인쇄되는 책마다 뒷장에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꽂고 통일과업 완수하자”는 문구가 빠짐없이 들어갔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금기였다. 오죽하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사형에 처해진 전 대통령 후보(조봉암)까지 있었을까. 북한은 통일을 협의할 대상이 아닌, 타도하고 회멸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교육 과정에서도 안보교육, 정치이념교육, 통일교육 등의 이름으로 반공교육만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졌다.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바뀐 때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였고, ‘평화통일’ 원칙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원칙화된 것도 유신헌법에서부터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통일을 위해 협의해 나갈 파트너’라는 목소리보다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수십, 수백 배는 더 크게 교육현장에서 울려 퍼졌고, 유신과 5공을 지나 민주화가 된 다음에도 이는 조금씩 비중 차이가 줄어들긴 했으나 변함없었다. 다시 한 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는 2000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남북의 지도자들. 그것은 수십 권의 교과서보다 더 학습 효과가 큰 시청각적 체험이었으며, 통일교육도 이제야말로 통일교육답게 이루어질 배경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의 충돌도 간간이 벌어졌고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았지만(이 즈음 발효된 통일교육지원법 내용에도 반영되었다), ‘남북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통일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은 국민 대다수에게 상식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반전은 다시 있었다. 북쪽에서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북핵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남쪽에서는 옛 권위주의 정권의 후계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통일교육도 다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라 지향점이 바뀌었다. 평화통일은 여전히 헌법에서나 교과서에서나 기본 원칙이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태도를 집약한 『통일교육지침서』나 새롭게 편찬된 학교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철저히 위협하고 열등하며 사악하게 묘사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은 통일교육을 할 때마다 빠뜨려서는 안 될 주제로 제시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침략자들을 응징하는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인 모습”이라며 연평도 당시 북쪽으로 포격하는 모습이 실렸다.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통일의 모양새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흡수통일이었다.

이런 ‘통일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의 통일관은 어떻게? 모든 기관에서, 모든 시점에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은 바닥을 친다.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의

견은 20퍼센트가 될까 말까이며,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비율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째서? 일단 젊은이들의 삶이 고달파서다. 그놈의 대학을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이며, 죽어라 죽어라 해서 대학에 들어갔더니만 또 취업은 왜 그리도 어려운가? 유치원에서 영어하고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하고 중학교에서 입시공부하고 대학에서 취업 공부하는 삶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들이대 봤자 썰렁할 뿐이다. 이를 고민해서 ‘통일의 필요성으로 민족보다 경제적 편익을 내세우자’는 전술 아래 시베리아 횡단철도니,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이니 하지만 당장 내 코가 석 자인 사람들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나중 세대는 몰라도 당장 우리는 등골이 부러질 거라는 예상도 통일을 기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통일의 대상이 대체 누구인가. 부모님의 말씀에서, 매스컴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 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폭력적이며 음험하고 거지 근성에 찌든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제발 맏소사! 이것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들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 대부분의 본심이다.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주어야 할까?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참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한다. 통일을 정권의 색깔이나 현 국면의 모양새에 따라 생각하기를 일단 멈추고, 대체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기성세대는 과연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까? 바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에 그것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된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이상 사회이며, 모든 철학과 법률과 교육은 그런 이상 사회를 목표로 삼고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통일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 통일이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엮어매고 있던 전쟁과 대립의 족쇄를 풀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비롯지만 우리도 사실 상당히 뼈뿔어진 사회, ‘헬조선’이며, 그런 뼈뿔어짐을 바로잡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 통일이기 때문이다.

‘분단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계속 왜곡되었다.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코흘리개 때부터 잔혹한 경쟁에 내몰리는가? 잘 사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좋은 일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은 분단체제에서 부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그들을 욕하면서도 그들의 밑에 들어가는 길만이 출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북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정치가 최고 우두머리 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두머리로 뽑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패싸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호시탐탐 노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마치 군대처럼 최고지휘관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왜 여협, 남협 논쟁에서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성 문제가 치열하게 들끓는 것일까?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가야 하는 세상에서 남성들이 ‘이익 공동체 의식’으로 은연중 뭉치고, 여성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타자화’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 사회의 오래된 병폐가 물론 모조리 분단체제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굵은 뿌리가 분단에 뻗어 있으며, 이런 폐단을 뽑아내 버리려면 대

통령 선거 한 두 번 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단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통일이란 한반도와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로우면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점을 기성세대도 깨닫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통일교육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통일교육과 함께 이 땅에서 오랫동안 기만되어온 교육들,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을 평화 통일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변하며, 북한의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울 점과 존경할 점을 찾고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충성만 맺은 평화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차원의 평화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그 과정을 진정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교육·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 만들자

그러하려면 이제껏 올바른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도 철폐해야 한다. 열의에 넘치는 많은 현장 교사들이,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려 해도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의 걸림돌이 두려워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형식적인 연수 외에는 받을 데가 없고, 받더라도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싶은 점은, 최근 통일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경향, ‘통

//

통일이란 한반도와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로우면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일교육과 함께 이 땅에서 오랫동안 기만되어온 교육들,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일보다는 평화’라는 경향이다. 물론 통일이 곧 평화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모색해야 함은 틀림없다.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주변 국가들도 살펴야 하는 이상, 무턱대고 통일을 외치는 일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접어두고 한반도 평화만 힘쓰자고 해버리면, 자칫 ‘현상유지’를 지향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분단체제에서 비롯된 헬조선적 병폐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져갈 것이다(한반도 문제는 남북통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평화 문제가 되어버리므로). 북한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지금 젊은이들의 의식은 더욱 굳어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통일과 평화를, 그리고 시민의식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공허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직 그 목소리를 접을 때는 아니다. 🌐

함규진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음으로
만나는 북한

5

평창 ‘임시평화체제’와 마음의 국제정치학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금지, 선박 검색, 노동자 해외송출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를 채택했다. 이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북한은 같은 달 29일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을 했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전쟁위기가 다시금 운위될 시점이었다.

그러나 극적 반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9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과 겹칠 수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72차 유엔총회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었다. 휴전 시간은, 2018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였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국정부에게 임시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평창이 만들어낸 남북대화, 다시 북미대화도 이어질 수 있을까

북한은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2017년 6월 “민족화해협의회 공개 질문장”을 통해 한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묻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그 이후 ‘쌍궤병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을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4원칙에 합의한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제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1월 2일 남북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후 한미 정상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했다.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가 결정되었다.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공식 국가수반인 김여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위원장은 대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중재와 미국 정부의 동의로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진 북미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와의 만남과 천안함기념관 방문 등 대북압박 행보를 했고, 결국 북한이 회동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북한의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정세에 따른 대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미의 축적된 감정의 골이 빚은 사건이었다.

다시 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대미외교 경험이 있는 외무성 관료가 참

석하며 북미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또한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북미대화 경험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철 부장의 방남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북대화나 혹시나 있었을 수 있는 북미대화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김영철 부장의 방남이 언급되자, 천안함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이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하기 바란다는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같은 날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에 대해 “가장 폭군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기둥”이란 비난을 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소비 직후이자 이방카가 한국을 방문한 2월 23일 미국 재무부는 다시금 독자적 고강도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사실상의 해상차단과 중국이 포함된 제3국 선박까지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제재”이고, 효과가 없다면 전쟁을 지시하는 “제2단계”를 예고한 제재였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8년 3월 25일까지 유효한 임시체제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내장한 소극적 의미의 평화체제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전쟁위기와 전쟁담론이 실제로 배회하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물론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북한이 2017년 11월 말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한 상황에서, 대북제재체제의 강화가 아닌 임시평화체제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형태전환의 예측을 위해서는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서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마음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한국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제안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시동을 건 사건이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해 왔던 쌍중단의 사실상 한 축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를 한국정부가 선택했다. 미국정부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가 한미동맹의 수정 또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쌍중단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입구로 주장해 왔던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택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연기결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참가로 호응했다.

북한 행동의 변화가 어떤 주체에게는 제재 효과로 읽힐 수 있다. 시장에서의 공급부족과 물가상승 등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북한이 대외정책을 수정했다는 해석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가 북한에게 국가행동 변화의 명분을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행동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북한 대외정책 수정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한 계기였다는 설명도 다른 하나의 해석으로 추가될 수 있다. 신년사에 나타나듯, 핵무력 완성이란 조건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자국경제를 위협하는 제재를 벗어나려 했을 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출범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처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집합적 마음이 표출되었다. 북한 대표단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에 상응하는 핵·미사일실험 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 자체와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북한이 한국에 제공한 대가였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의 수정과 조정 그리고 대북제재의 독자해제를 감수하면서까지



2월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선수와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북미대화를 중재하려 했지만, 북한이 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대화는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평창 임시평화체제 이후의 사태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올림픽 기간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한미 스스로 훈련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란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합동군사훈련 연기가 제안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쌍중단을 수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대화가 있었다면, 그 대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을 언급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 내 해상사단이 포함된 추가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방한했을 때도 이미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미국 재무부 므누신 장관의 주장은, 강한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한미동맹 지속의 삼각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경축사에서 2019년 3·1절을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선”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3월 5일 대북특사와 대미특사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을 매개로 북미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이다. 관건은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다. 핵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사이에서 의제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험로다. 만약 평창패럴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유도하며 북미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더불어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까지 포함된다면, 한미동맹의 수정 또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남북한 사이에 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북미대화는 없을 수 있다. 북미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가진 두 국가이기에 핵동결과 비핵화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상상 가능한 정책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삼각모순(trilemma)’에 직면하고 있다.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면,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얻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수정 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칫 한미동맹의 수정 또는 조정을 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한국은 국내정치적 파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두 정책목표만을 선택하는 것은 북한을 핵국가로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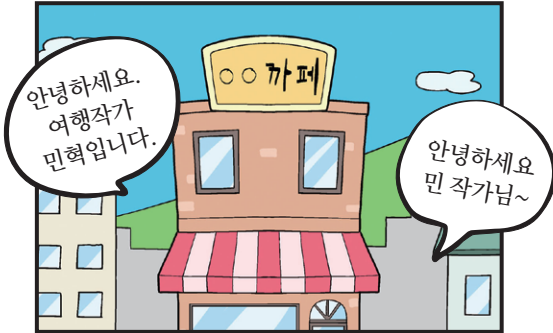
한미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진행된다면 정책목표를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으로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지속이 가능한 경로는 강압에 의한 북한의 변화 또는 붕괴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상상하기 어렵다. 인간과 국가의 마음은 서로 모순적인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성의 시각에서는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선택이 관성의 집합체인 감정과 창조적 의지의 작동에 의해 만들어지곤 한다. 🌀

구갑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 대학 외래교수, 릿쿄 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Hello, 북한

- 제1편 평양 & 함흥 -

그림 · 박현



평양 지하철은 1973년 9월 6일 개통됐어요.
한국의 지하철 1호선(1974년 8월 15일)보다 빨리 개통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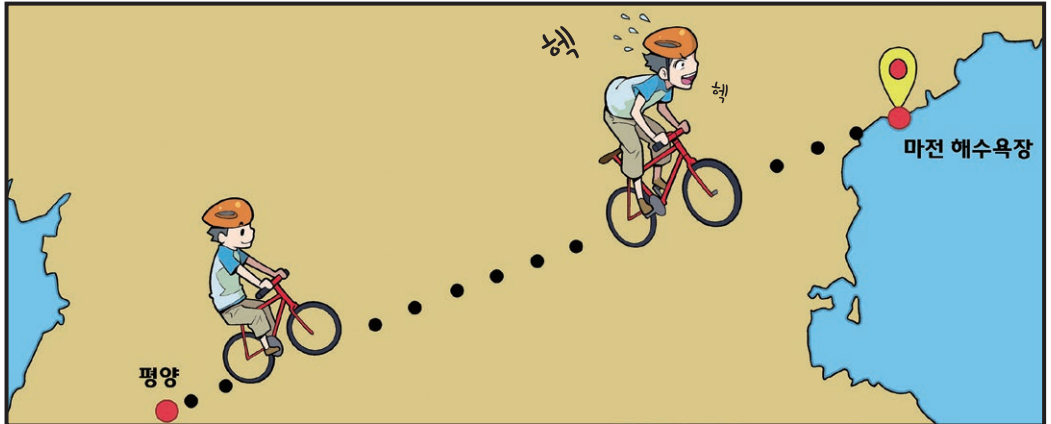
평양 지하철 노선도는 천리마와 혁신선, 크게 2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방공호 역할을 하고 있어 지하 100m 깊은 곳에 지었지요.



역명 또한 지역이나 주변 건물의 이름을 딴 한국과 달리 혁명 전통성을 강하게 띄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용요금은 북한 돈으로 5원! 한번 타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함흥까지 자전거 트레킹 도전!



여기가 바로 함흥에서 가장 큰 해변이 있는 마전해수욕장!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해수욕장과 함께 북한에서는 손꼽히는 피서지예요!
백사장의 길이만 6km!



정말...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요.
이곳 함흥엔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된 함흥왕궁이 있어서인지 저도 이곳에서 돌아갈 걱정일랑 잊고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네요.



제가 태종 이방원의 사신이 되어 여기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갈 거예요!
하하하

이제 또 떠나볼까요~
새로운 곳으로
go go!!!



편집자 주 : 여행자가 민혁과 함께 미리 떠나보는 통일 여행기입니다.
북한의 자연, 음식, 역사, 교육, 국가행사까지 시리즈로 소개됩니다.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3

과외활동 나가는 아이들

—
조천현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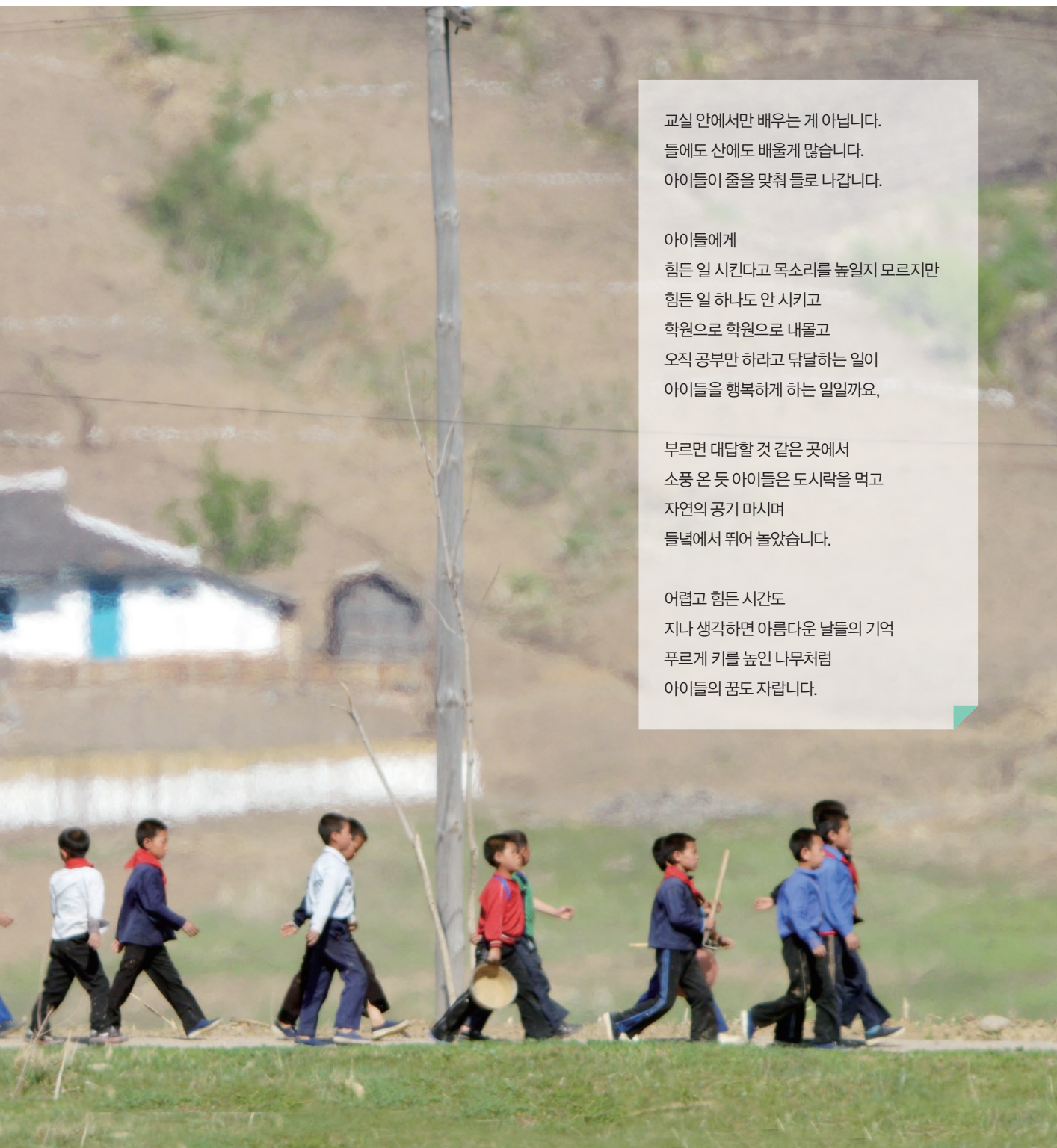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들에도 산에도 배울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맞춰 들로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일 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지만
힘든 일 하나도 안 시키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뒤통하는 일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요,

부르면 대답할 것 같은 곳에서
소풍 온 듯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고
자연의 공기 마시며
들녘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지나 생각하면 아름다운 날들의 기억
푸르게 키를 높인 나무처럼
아이들의 꿈도 자랍니다.



문학 속
통일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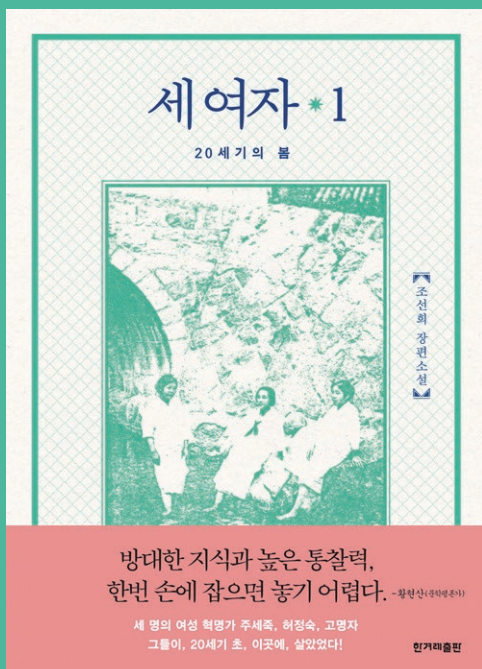
7

21세기에 도착한 20세기의 바람

식민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감내한
세 여전사의 파란만장

조선희의 『세 여자』론

오태호 문학평론가



20세기의 빛바랜 신화

모든 기록은 한 장의 빛바랜 사진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이 양피지 한 장에 콜롬비아의 역사를 담아냈듯,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초기 역사에 새겨진 신산한 삶과는 무관한 듯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다리를 드리맨 세 여성은 부제처럼 ‘20세기의 봄’을 표방한다. 그러나 그 봄은 여름날에 찍힌 ‘반어적 봄날’이다. 이후 세 사람의 인생에 펼쳐질 혹독한 시련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일종의 일장춘몽처럼 회상될 사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이 세 신여성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면인가. 작품의 <프롤로그>는 1991년 12월 박현영과 주세죽의 딸인 ‘비비안나 박’이 서울을 방문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칙칙한 흑백사진들 가운데 유난히 밝고 화사한 한 장을 보여준다.

사진에는 여름인 듯한 계절의 한낮에 “세 여자가 개울에 발 담그고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팽팽한 종아리와 통통한 뺨, 가쁜한 단발은 세 여자의 인생도 막 한낮의 태양 아래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청계천에서의 여유로운 물놀이 풍경은 세 여성의 재기발랄한 청춘의 현장을 대변해준다.

이렇듯 주세죽(1901~1953), 허정숙(1902~1991), 고명자(1904~1950)는 1920년대 ‘정치에너지 대폭 발의 시대’에 공산주의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언론으로부터 ‘트로이카’로 명명된다. 이 세 여성들과 함께 1900년생 동갑내기로 청년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던 ‘주세죽의 남편 박헌영, 허정숙의 남편 임원근, 고명자의 애인 김단야’ 등의 세 남성 역시 ‘또 다른 트로이카’로 불린다. 1920년대 초중반에 맺어진 세 여자와 세 남자의 끈끈한 연대는 ‘우정과 애정과 이념’이 버무려져 이후 공고해진 관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1925년 11월 제1차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구속과 도피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운명은 식민지 조선의 숙명적 부침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비극적 여정이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굴레의 하나였음이 드러난다.



지난 2007년 8월 15일 주러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됐다. 이날 훈장은 고인이 된 주세죽을 대신해 그의 딸 비비안나 박이 받았다. ©연합

식민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감내한

세 여전사의 파란만장

붉은 사상과의 자유연애, 조선의 콜론타이

- 허정숙

이 작품에서 가장 오래 자신의 흔적을 한반도에 새긴 존재는 허정숙이다. 1902년 경성에서 출생하여 1991년 평양에서 사망한 허정숙은 공산주의적 신념을 실천하면서 남과 북,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을 돌아다니는 등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온갖 간난신고 끝에 북한 체제 성립과 안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허정숙의 이야기는 1920년 19세 상해행부터 기록되어 70여 년에 이르는 장대한 일대기가 서사화된다.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105인 사건)이 터지면서, 정숙은 임원근, 박헌영, 주세죽과 함께 체포되고, 단야는 조선을 탈출한다. 이때부터 해방과 분단 전쟁기에 이르는 25년 동안은 세 여성 모두에게 시련과 좌절, 희망과 절망이 이어진다. 정숙은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별명이 붙은 채 첫 남편 임원근과의 결혼과 이혼, 송봉우와의 연애와 이별 등을 거치며 ‘혁명유류분자’, ‘부르주아 전향자’라고 비판받지만, 새로이 최창익을 만나면서 함께 남경으로 가서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평양에 입성한 정숙은 선전부 일을 맡으면서, 박헌영과 연안파와 소련파를 분할통치하는 35세의 김일성에게 찬탄한다. 1949년에는 최고검찰소 부소장 채규형과 로맨스를 불태우지만, 소련파였던 그는 한국전쟁 중 열린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 직후 총살된다. 이후 정숙은 1952년과 1956년

반종파투쟁 이후에도 연안파의 일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사법상 등으로 활약하다 1991년 6월 5일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사망한 뒤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묻힌다. 90년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여성 공산주의 자로서의 삶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북쪽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감된 것이다.

비운의 정치범 유형수

- 주세죽

반면에 주세죽은 1901년 함흥에서 출생하여 1953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할 때까지 박헌영과 김단야의 부인이자 1938년 이후 정치범 유형수로 살다가 세상을 뜬 비극의 주인공이다. 1920년 가을 주세죽은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로 오게 된다. 교육자이자 신앙인의 꿈을 가지고 있던 세죽은 ‘사회주의연구소’에 온 뒤 현영에게 ‘고독의 그림자’와 함께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세죽에게 현영은 “사랑과 혁명이라는 강렬하고도 민감한 발화점”이 된다. 두 사람의 결혼 이후 1925년 11월 현영과 함께 붙잡힌 세죽은 현영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1928년 열차로 5~6차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으면서 열차에서 핏덩이 아이를 낳고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소련 요양소에서 건강을 되찾지만, 1932년 상해에서 현영이 다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된다.

이후 세죽과 단야는 중국인 부부 행세를 하면서 상해를 떠난 뒤 1934년 1월 두 달의 여행 끝에 모스크바로 들어간다. 1934년 세죽과 단야는 혼인신고를 하고, 1937년 봄 세죽이 두 번째 임신을 하지만 단야가 일본 밀정이라는 악의적인 투서가 코민테른에 접수되면서, 숙청이나 조선이나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결국 1938년 5월 22일 남편 단야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세죽은 생후 6개월된 남아를 데리고 ‘크질 오르다’라는 유형지에 내리지만, 폐렴이 악화된 아이

는 죽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작업에 동원된다. ‘사회적 위험분자’라면서 5년간 카자흐스탄에 유배된 것이다.

더구나 해방 이후 1946년 스탈린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만, 1948년 1월에 “베라 한의 전과말소 청원을 기각한다.”라는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의 청원 거절 통보를 받는다. 이후 모스크바 사위집에 와서 1953년 영면에 든다. 1989년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30~40년대, 50년대 초에 일어난 박해사건 희생자들의 복권> 조치에 의해 비로소 복권된다. 그러나 그렇게 1938년 이후 15년의 유형 생활 동안 과연 주세죽의 신념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묵묵부답인 20세기 공산주의 여성운동가의 비극적 응답은 텍스트를 통해 되살아온다.

‘중간파’ 공산주의 운동가, 한반도의 경계인

- 고명자

양반댁 규수로 이화학당을 다니던 고명자가 1920년대 초 여성동우회 강의실에 나타나자, 세죽은 사상 공부를 시킬 과외선생으로 단야를 붙여준다. 결국 보름 만에 양반집 규수가 마르크시스트로 개종된다. 명자는 세죽과 현영 부부, 정숙과 원근 부부를 보면서 자신도 ‘행복한 혁명가 부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후 1925년 모스크바 유학생 명단에 고명자가 포함되어 모스크바공산대학을 다니고, 단야는 국제레닌대학을 다니면서, 신방을 꾸미게 된다. 경성에 온 명자는 1930년 광주학생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지만,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의 피고 23명 중 혼자만 집행유예를 받아 예외적으로 관대한 처분이라는 의심을 산다. 1932년에도 명자는 메이데이 격문을 살포하고 다시 체포되어, 단야의 은거지를 대라며 고문을 당한 뒤, 전향서에 사인을 하고 석방된다. 이후 1939년 종로서 형사의 강요로 친일잡지인

〈동양지광〉 편집자로 참여하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건준의 여운형 밑에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서울시지부 선전부장을 맡게 된다. 1948년 4월 18일 평양에 남북 연석회의 준비위원회 소속으로 내려가지만, 정숙과 십수 년 만에 만나, 단야와 세죽이 부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5월 5일 서울로 돌아온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출감한 뒤, 다시 근로인민당 간판을 내걸지만, 동네 인민위원회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전향하라는 말을 듣는다. 명자에게 ‘중간파’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빨갱이와 같은 말이지만 인공 치하에서는 반동분자와 동의어로 인식된다. 전쟁 중 서울에서 사역에 동원되어 일하다 폭격에 사망한 명자는, 남쪽이나 북쪽 등 이 지상 어디에도 자신의 자손이나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여 세 여성 중 가장 비극적인 생을 보여준다.

20세기의 바람, 21세기의 회한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세 여성의 삶에 대해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애드벌룬처럼 떠오르던 20세기 초반에 그들의 인생은 지옥 속에서도 가끔 봄날이었다.”라고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에 드러나듯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는 “체제나 혁명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태도와 정책의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듯 공산주의의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19세기에 발원하여 20세기를 관통한다. 그러나 21세기에 공산주의의 전망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의 공세 앞에 거의 몰락한 채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다. ‘공산’의 이상은 이제 ‘자본’의 현실 앞에서 과거의 신화로 빛바랜 셈이다.

다시 20세기 여성의 비극적 생을 반어적으로 압축 상징하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주세죽이 25세, 허정숙이 24세, 고명자가 22세였던 사진 속 여성들의 단

//

봄날의 시작이었어야 할 사진은 일제 강점기 ‘반공’의 주홍글씨 속에 청춘의 끝을 상징하게 된다. 그렇게 얹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세 신여성들의 푸르고 아름다운 청춘은 20세기 여성의 신산스런 삶을 반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2세기에 회억될 21세기 사진 한 장은 21세기적 전망이 한껏 담긴 풍경이길 기대해본다.

//

말은 그야말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핫이슈였다. 그녀들의 단발이 “독립된 인격체”를 강조하는 1인 시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봄날의 시작이었어야 할 사진은 일제 강점기 ‘반공’의 주홍글씨 속에 청춘의 끝을 상징하게 된다. 그렇게 얹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세 신여성들의 푸르고 아름다운 청춘은 20세기 여성의 신산스런 삶을 반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2세기에 회억될 21세기 사진 한 장은 21세기적 전망이 한껏 담긴 풍경이길 기대해본다. 이를테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화문 광장을 수놓은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사진이기를. 그리하여 21세기적 대표 사진은 22세기적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망을 내포하며,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며, 참과 진실의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에 당선됐고 경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학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읽다』, 『허공의 지도』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南



01



02



03

01. 영화시리즈 우표 6집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 씨름, 무동, 베풀기, 우물가
| 1971.8.20.
02. 영화시리즈 우표 3집 김홍도의 적벽도
| 1970.12.30.
03. 한국미술 5000년 특별우표 김홍도의 산수화
| 1980.2.20.

우표로 보는
남과 북

15

시대의 모습을 담은 천재화가 김홍도

이상현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인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로 유명하다. 서민들의 일상을 묘사한 그의 풍속화는 우리 조상들의 얼굴 표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그 속에 해학적인 요소를 담아내어 시대의 기록물임과 동시에 그림 한 장 한 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야기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홍도가 영·정조 시대 도화서 화원으로 산수화, 인물화, 화조동물화, 능행기록화, 불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만능화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北



01

01. 명인시리즈 김홍도 우표. 김홍도의 모습을 유추해 그린 초상으로 보인다. | 1960.3.16.

02. 김홍도의 풍속화 6종. 집짓기, 베짜기, 대장간, 무동, 서당, 씨름 | 1965.12.15.

03. 김홍도의 '약초를 캐고서'. 영지버섯을 따고 내려오는 선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 2010.9.1.

04. 문화유산 특별우표 김홍도 풍속화 대장간과 베짜기 | 2015.10.29.



02



03



04

이와 같은 평가는 남과 북의 우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남과 북 공히 우표에 가장 많이 등장한 화가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북측에서 발행한 김홍도의 풍속화 우표 속 그림의 소장처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점이다. 보물 제527호인 풍속화첩은 25점의 풍속화를 담고 있는데, 남측에서는 1971년 명화시리즈 우표를 통해 그리고 북측에서는 1965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그림들을 우표의 소재로 삼았다.

위 3종류 모두 같은 소재이지만 우표의 표현 방식은 다르다. 북측의 1965년 발행 6종 우표들은 단색으로 오돌토돌하게 인쇄한 요판 인쇄를 통해 대상을 윤곽선만으로 표현하였고, 1971년 남측의 우표는 대형 사이즈 우표로 바탕색과 인물의 색을 보정하여 선명

하게 처리하였다. 최근 북측 우표에서는 원본 사진에 가깝게 인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우표 디자인의 의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인쇄 기술적 한계 속에서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북측의 박물관에도 김홍도의 여러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시대를 초월해 남과 북 모두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화가 김홍도. 북에 있는 그의 작품을 만나러 지금 바로 차에 올라 자유로를 달리고 싶다. 🚗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과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new Book

편집부



새로운 북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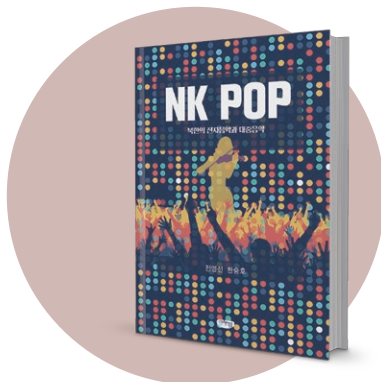
박재규 외 | 한울 | 2018. 2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기회와 도전적 요소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신형 국제관계'를 내세우며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의 중국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북한은 더욱 핵을 움켜쥐고 있다. 제3차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문제와 미중관계 변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일의 길을 여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당면한 북한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해마다 적지 않은 북한 관련 책들이 발간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를 담은 가치 중립적인 글들은 많지 않다.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를 만들고자 고민한 결과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과 시각을 함양하고자 노력하였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충실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NK POP :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

전영선·한승호 | 글누리 | 2018. 2

북한의 대중음악에 대한 소개서다. 김정은 시대 아이콘으로 부상한 모란봉악단의 의미와 활동상, 멤버 소개에 이어 북한에서 전자음악이 탄생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 북한식 전자음악의 특성, 그리고 198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보천보전자음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 김정일시대에 탄생한 삼지연악단, 은하수관현악단에 대한 해설과 분석을 담았다. 책을 통해, 그리고 현재 북한 대중음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변했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알게 된 것처럼 이제 북한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과는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시각일 수 있다. 저자는 음악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감성의 소통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기에 남북 관계에서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남북의 만남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음악이 빠지지 않았다는 예를 들고 있다. 북한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풍부한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잘 녹아들어있어 북한 음악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의 필독서가 될 만하다.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김연철 | 창비 | 2018. 1

분단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냉전의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남북이 걸은 길을 돌이켜 보면, 바다 한가운데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사람들이 오가며 물자가 넘나들던 해빙의 순간들이 있다. 적대의 바다는 때로 협력의 공간으로 변하기도 했다. 두번의 남북 정상회담, 이산 가족 상봉, 세계선수권의 남북 단일팀, 개성공단 조성 등 한 때 남북을 이어주던 다리는 왜 오늘날 자취를 감춘 것일까? 북한이 핵 도발을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늘 상호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 책은 휴전협정부터 북핵문제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지난날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의 지혜로, 좁은 눈이 아닌 넓은 눈으로, 단절이 아닌 역사의 지속으로 조망한다. 남북관계는 국제정치 질서와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대결과 악화, 접촉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전쟁을 일시 중단'하는 정전(停戰) 이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종전(終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저자는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흔히 북한의 대남정책을 중시하던 데서 눈을 돌려, 종전과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북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주승헌 | 생각의힘 | 2018. 1

2002년, 저자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심리전 방송요원으로 복무하다 휴전선을 넘어 한국에 왔다. 휴전선을 건너는 데에는 불과 25분이 걸렸지만, 그날 착종된 트라우마는 10년 넘게 저자를 괴롭혔다. 그는 지금도 비무장지대의 한가운데에서 지뢰를 밟고 서 있는 고약한 악몽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사선 너머의 사선'을 건너고 있다. 탈북민을 향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 배제와 싸우며 저자는 통일학 박사가 되어 통일 문제를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25분 만에 비무장지대를 건너 10년 만에 통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이면서도 우리의 뒤를린 현대사와 일그러진 맨얼굴을 보여주는 슬픔의 책이다. 탈북민인 그는 스스로를 '조난자'로 부른다. 조난자는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난 사람을 의미한다. 저자에게 탈북민은 한반도의 분단 역사라는 재앙을 맞아 난파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과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반도의 조난자들'을 호명해낸다.



Network

민화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3+04

1 민화협 제20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 2018년 주요 사업 승인 및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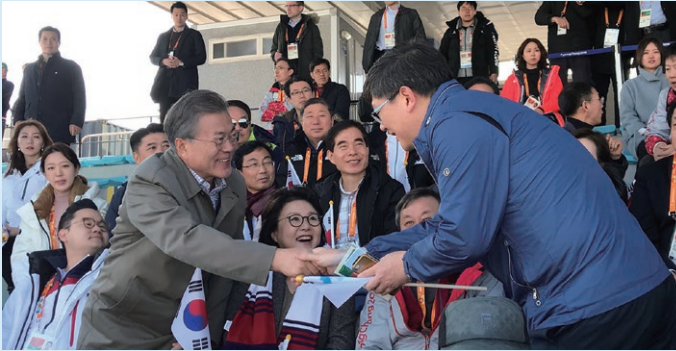
민화협 제2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남중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3월 7일(수) 오후 2시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민화협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대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대독)와 민화협 우수회원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으며, 2부 대의원회에서는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10기 임원 교체 및 추가선출, 정관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이 승인되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대회사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이어진 특사 파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민화협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현실점에서 민간교류의 길을 새로이 열기 위한 방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민화협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의 대독을 통해 “그 동안 민화협은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다”면서 “분단의 시간, 단절의 시간을 넘어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와 협력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회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도 수여됐으며, 민화협 회원단체 대표 등 18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 민화협, 평창에서 ‘한반도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평창패럴림픽과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해”



3월 14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이 경기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반도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 민화협은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30분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진행 중인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앞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배지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고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참석하여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김홍걸 대

표상임의장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민들에게 직접 배지를 나눠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한반도 배지가 새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 브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화협이 국민과 함께 여는 평화와 번영의 통일 미래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상임의장은 “남북이 함께 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가 한반도 통일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로드맵

민화협은 3월 2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과 과제를 진단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론화 및 국내적 지지기반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일 시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프로그램(14:00~16:30)

• **인사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사 회**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 표**

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

② 북미대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모색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토 론**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문의: 민화협 정책홍보팀 (02-761-1213)

Readers

Vol.90 2018 01+02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0호의 정답은 '수호량'과 '반다비'입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김홍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권두인터뷰에서 민주·평화·민족화해의 가치를 새 시대에 맞게 계승해 나가겠다는 포부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민주·평화·민족화해는 하나 된 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 속에 전쟁 없는 한반도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민화협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 모두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매진해 한민족 공동체의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송두월 서울시 도봉구



개성공단의 경험 수기를 읽고서 지금은 중단된 개성공단이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공생을 하는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학습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어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민족화합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최산도 충남 홍성군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북한 남성의 극 중 캐릭터에 관해 분석한 글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가서 반공 영화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반공 영화 속의 북한 남성들은 모두 악마와 같았습니다. 요즘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북한 남성들의 캐릭터가 이념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묘사하는 것 같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철 서울시 동작구



“북한의 겨울나기, 따뜻한 자식사랑은 다르지 않아요”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공 얼어붙었던 한반도 겨울, 우리 아이들도 유행하는 애벌레 옷, 롱 패딩을 어쩔 수 없이 못 이겨 시주했는데, 북한 아이들도 밝은 색상의 두꺼운 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북한이나 우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의 겨울 날씨도 만끽해 보고 싶어요.

• 한유채 전남 여수시



사내 직무연수로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스틱으로 퍽을 쳐서 상대 팀의 골에 퍽을 넣기 위해 얼음을 가르는 선수들의 박진감과 땀방울이 응원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 경기가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사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녹아들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봅니다.

• 방윤희 서울시 송파구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화협만의 생생한 소식과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www.KCRC.or.kr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남북한 어린이 동요 시리즈 |

고향의 봄

작사 이원수 작곡 홍난파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북한의 평양 모란봉 제1 고등중학교 음악수업 현장에서도 우리 귀에 익숙한 동요 중 하나인 '고향의 봄'이 불리고 있다. 이 곡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곡으로 구슬픈 멜로디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북 공통의 정서가 흐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 남북한 어린이 동요 시리즈 |

고향의 봄

작사 이원수 작곡 홍난파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북한의 평양 모란봉 제1 고등중학교 음악수업 현장에서도 우리 귀에 익숙한 동요 중 하나인 '고향의 봄'이 불리고 있다. 이 곡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곡으로 구슬픈 멜로디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북 공통의 정서가 흐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중화해

Vol. 91

2018 March + April

03

04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길



Contents



02 포토 에세이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소식

06 권두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한미 간 구체적 대북 협상 로드맵 마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만들어야

12 시선 대 시선

남북관계의 틀로 들어온 북핵문제,

평창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이어가는 정상회담 되어야 | 고유환·윤덕민

18 특집

• 2018년 한반도 대 전환의 길, 어떻게 열까

① 남북·북미협상의 지속 위해 다층적 교류협력·신뢰구축 필요 | 정창현

② 미국의 안보 위협하는 북한, 북미 간 점점 찾는 중간지대 역할 중요 | 박인휘

③ 평창을 통해 본 국민들의 통일·북한의식

차근하게 평화논의 시작해야 | 조영주

30 이슈 앤 포커스

2018년 북한 경제 어디로 갈까?

높아진 대외의존도, 대북제재 장기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 김석진

34 특파원 리포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북핵 해결 과정 속 러시아의 이일대로(以佚待勞) | 정의길

38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제1사무차장

하나 되는 태권도, 통일 코리아의 시작입니다! | 염규현

42 뉴노멀, 한반도 평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분단과 통일 | 김성경

46 줌인 북한

‘음악정치’로 본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평화의 절실함에 공감한 평화의 노래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 천현식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화협만의 생생한 소식과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www.KCRC.or.kr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